

여성장애인의 삶의 문제에 대한 사회적 지원방안

국회의원 김 홍 신

여성 그리고 장애인이라는 이중적인 사회적 차별구조 안에 놓인 여성장애인의 인권, 삶의 문제가 무수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여성장애인에 대한 특화된 개입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었다. 부족하나마 1999년 장애인인권헌장에 여성장애인 관련 조항이 신설되면서 여성장애인에 대한 개입의 단초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심포지움 역시 여성장애인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고 보여진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많은 의견을 듣고 여성장애인의 사회적 자활과 자립을 위한 실천적 정책 제안을 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생각했던 몇가지 사안을 공유하고자 한다.

먼저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지원에 대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발제자께서 여성장애인의 교육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한 사회적 지원책에 대해 충분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은 범위에서 말씀드리고자 한다.

앞서 발제자께서도 지적했듯이 여성장애인은 경제활동참가율, 고용율, 임금수준 등의 각종 지표에서 남성장애인보다 열악한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문제는 각 단계에서 겪었을 교육, 정보, 훈련등의 기회 박탈의 결과물이다. 여성장애인의 이중적 차별구조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문제는 여성장애인의 생애주기(아동기-청소년기-성인기...) 각 단계의 구체적 개입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제가 주목하고 있는 활동은 장애아동의 조기 보육권(교육권)확보이다. 장애아동의 조기 교육은 극히 제한적이지만, 장애여아에 대한 조기교육의 기회는 보다 제한적이다. 여성장애인의 빈곤이나 실업 문제를 양적, 질적 조사로 설명하고 있는 몇몇 국내 학술지에는 빈곤이나 실업의 개인적 요인중에 들고 있는 것이 장애인 자신의 자신감 부족, 대인관계의 부족, 양육시 가족들의 지지 부족 등을 들고 있다. 장애아부모 역시 장애아동에 대한 개입에 있어 성에 따른 이중적 사고를 하게 된다. 남아에 대해서는 자립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는 반면 여아에 대해서는 가족안에서 책임지려고 하는 경향을 띤다.

여성장애인은 이렇듯 유아기때부터 이중적 차별 구조안에서 성장하게 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규교육 전 조기교육의 활성화를 통해서 장애아동의 능력을 최대한 배양시키고, 동시에 부모교육을 통해 긍정적 양육태도, 풍부한 정보제

력을 최대한 배양시키고, 동시에 부모교육을 통해 긍정적 양육태도, 풍부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장애인에 대한 정책적 제언의 대부분이 불평등한 사회구조에 대한 보완적 시스템에 맞추어져 있었다. 즉 기업의 의무고용, 적합한 취업직종 개발, 직업훈련 강화 등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물리적 사회환경의 개선은 필수적이다. 이와 동시에 여성장애인 스스로의 자활의지 및 자립의지에 대한 심내적 동기 부여를 개발하는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한다. 여성장애인은 취업과 관련하여 사회활동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사회적 편견에 대한 무기력을 종종 경험하게 된다고 한다. 여성장애인 스스로 인식의 전환을 가질 수 있는 상담이나 사후지도 프로그램들이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하고, 직장동료나 고용주 역시 여성장애인의 직장생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여성장애인의 인권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들으면서, 여성장애인의 성폭력 나아가 인권 문제의 심각함이 절실하게 다가온다.

여성장애인의 인권현황 주제와 관련이 있는 몇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한다.

제가 96년 국정감사 때 정신지체장애인 시설 효정원에서도 뇌물상납, 회령, 성폭행, 강제노역 등 다양한 시설문제가 있었지만 관할경찰과 행정기관에서는 시설 이사장의 진술에 의존한채 횡령부분에만 초점을 맞추어 수사를 진행하였다.

전직경찰인 시설 이사장을 비호하려는 의혹도 있었지만, 성폭행 피해자인 정신지체인의 의사표현의 한계, 모호한 시간개념 등을 대변할만한 전문가의 개입이 부족하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다. 이를 위해서 발제자께서 제안했던 장애인의 특성과 성폭력을 잘 이해하는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

99년에는 강제불임수술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를 계기로 복지부에 생활인 중심의 사회복지시설 정책 재검토, 장애인 부모, 시설관계자, 생활인에 대한 성교육 실시 등 몇가지 정책적 제안을 했다. 시설에 대한 전면적 정책 변화는 지금 여러 논의가 진행중에 있고, 성교육 프로그램은 부족하나마 확대 시행되고 있다.

발제자께서도 지적했듯이 시설에서 발생한 여성장애인의 인권문제가 시설 문제의 일환으로만 제기되면서 여성장애인의 인권문제로 전면화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이에 대해 수사과정-재판과정-피해자 사후 상담, 보호라는 일관된 선상에서 체계적인 장치가 개발되어야 한다.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되었던 정책적 제안을 검토하여, 이후 의정활동을 통해 풀어낼 것을 약속드리며 토론을 마감하고자 한다.